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지역...지원센터>의 역할 재설정을 위해 말 뜯어보기

- 2025 지역 문화예술교육 성과 포럼 김해보 토론문
- 일시/장소: 2025. 12. 18.(목) 13:00~17:00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
- 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토론주제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방향

저는 두 가지 맥락 위에서 두 가지 토론 이슈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토론에서 유효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라는 말을 쪼개서 각각의 의미를 새로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맥락	토의할 이슈	검토할 사항
1. <AI 기술>과 <Human> 담론이 풍년인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의미
2. <지역문화>에서 <로컬매력>으로 전환할 때	지역지원센터의 역할 설정	지역의 의미와 중앙과의 관계

1. <AI 기술>과 <Human> 담론이 풍년인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

지금은 <AI 기술>과 <Human> 담론이 풍년인 시대입니다. 지구 상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종의 출현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인간다움의 마지막 보루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문화>와 <예술>도 재정의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근대 민족국가 체제 성립을 위해 일본인들이 유럽에서 수입하여 번역했던 Culture와 Art의 개념으로 그것을 논하는 것은 허망합니다. 동아시아인 삶의 밑 바닥에 깔려 있는,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린 文과 藝의 의미가 오히려 알고리즘이 되어버린 문화의 시대에 인간이 선택할 길을 더 선명하게 설명해줍니다. 인간을 넘어 만물 사이의 소통,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행위로 본 동양의 문-예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文	物相雜，故曰文 (周易 繫辭下傳) (물상잡, 고왈문 : 물들이 서로 뒤섞이는 것, 그것을 문이라 이른다)
예술	藝	藝，益也。从木，亦聲。技也 (說文解字) (예 익야, 종목, 역성, 기야 : 예는 키우는 것이다. 나무를 따랐다. 소리 역시 이를 따랐다. 그리고 기술이다)
교육	教	爻(효: 배움) + 子(자: 자녀)+ 攴(복: 회초리? 복채?)

문화정책의 입장에서 같이 붙이기도 하고 띄우기도 했었던 <문화>와 <예술>이 AI 시대에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면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까요?¹⁾ 자기 내면을

1) 관련 글들은 김해보의 브런치 스토리를 참조하세요. <https://brunch.co.kr/@seaokof/69>, <https://brunch.co.kr/@seaokof/94> 등

살려서 강한 개별자로서 더 큰 개별자를 이루기 위해 타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마음이 동양의 문-예의 의미에서 얻어집니다. 생활문화와 차별되는 사업영역 확보와 공공성을 당연시 하기 위해 버리지 못하는 <교육>이라는 말이, 알고리즘의 개취 존중 시대에 매력적이게 들릴까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안에서 배우겠다고 책상에 앉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평생 배움으로 자신을 키워가는 <즐거운 어른>까지 껴안으려면 말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 말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떤 뉘앙스를 덮어써야 할까요? <교육>을 굳이 <교화>하는 회초리가 아니라 <추임새>를 넣는 공감의 복채로 해석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공공영역에서나 잘 통하는 정책언어를 그대로 포스터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적절할까요? 뉘앙스만 바꾸는 말장난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속에서 그 방향을 새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 재설정을 위해 이 셋을 잇는 문화정책의 논리는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2. <지역문화>에서 <로컬매력>으로 전환할 때, <지역지원센터의 역할 설정>

2000년 이후 4반세기 동안 높이 치켜들어 온 한국문화정책의 황금열쇠, <지역문화>! 사실 되돌아 보면 그것으로 열 수 있었던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이라는 정책 구호는 사무를 이양할 <지방>이라는 행정 용어로 자주 대체됩니다. 그동안 문화정책 안에서 소위 지역의 주체들이 정책 안에서 <지역>이라는 말을 만날 때 더 강하게 지키려고 한 것은 다양한 <정체성> 보다는 중앙과 연결된 <효율적 정책 전달체계> 위에서의 <주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오락가락했던) 돈과 실적과 통제가 흐르는 전달체계 위에서 중앙과 대등한 지역의 주체는 없었습니다. 중앙이 없어지면 지역도 없어지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하던 지역이 지역이 오히려 나서서 중앙이 없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대가 있어야 나도 존재할 수 있는, 연하여 기대어 있는 관계입니다.

중앙	정책 원리	Global	보편/원리
	정책 주체		
지역	지역의 전달체계 vs. 지역의 정책주체	Local	개별/사례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활동 주체		

지역에 위치한 문화국가 서비스 대행자 또는 전달자로서 당연히 지역에서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따로 지키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도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의 목표가 달성되면 지역의 문화는 비슷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말로 다시 지역의 정체성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의 역할을 재설정하려고 해도, 지역문화정책보다 더 많은 예산이 흐르는 정책 흐름에 편승하려고 해도, <지역>의 의미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시 큰 돈이 흐르는 정책의 형국은 시니컬하게 비판할 일이지만, 균형발전이나 문화분권이라는 형식적 가치를 치켜세우기 보다는, 로컬의 다양한 매력과 사람들의 개별자로서의 주체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안에서 <지역>의 의미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센터가 지원의 주체로서 인식해야 할 지역의 활동주체들은 센터를 어떤 존재로 볼까요? 국가 차원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서비스에서 차별받고 싶지 않으니, 중앙과의 연결고리로서 센터가 존속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공동 기획-창작자로서 역할을 바랄까요?

중앙정부의 정책 주체는 지역센터와 지역의 활동주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역의 다양한 사업실적과 성공 사례가 중앙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로만 쓰인다면(!) 숙주-기생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중앙/보편/글로벌 정책/원리가 지역/개별/로컬 사례의 창발을 유발하고, 로컬의 사례가 정책 원리를 바꾸는 관계는 공생관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철 지난 글로컬(g-local) 담론도, 상향식-하향식 이야기도 식상합니다. <클로벌(C-lobal = {Close, Cultural, Contextual} X {Local, Global})은 어떨까요? 로컬의 문화적 사례가 글로벌한 원리를 바꾸는, 글로벌 한 원리가 로컬의 맥락에 맞춰 지역화되는 관계를 표현하려는 말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사실은 나뭇잎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겨울로 들어갈 때 해가 짧아져서 광합성 활동으로부터 얻을 이득이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 들이는 에너지보다 적을 때 나무는 물 공급을 중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 밑에 있던 나뭇잎의 본질적인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단풍이 드는 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중앙정부에서 공급되던 예술교육 예산의 물길이 끊어졌을 때 지역에서 나뭇잎의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나무가 계속 예술교육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을지, 생활예술로 불릴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 동네에서 불리던 대로 그냥 <나무>로 살아갈지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가 고목이 되어가는 나무 앞에 와서 “이 나무가 사실 몇 천년 전 이곳을 지나던 고승이 꽃았던 지팡이에서 자란 유서 깊은 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붙여준다면, 그 나무에는 또 관심과 돌봄이 집중될 것입니다. 예술교육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서 그 가치를 잃어주며 공공 자원 투자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일 것이고, 정부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로 불리든, 그냥 동네 당산나무로 불리든 상관없이 오래된 그 나무를 잘 지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sea@sfac.or.kr)